

# 전남도, COP33 여수 유치...국가전략으로 추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정부에 남해안남중권 개최도시 선지정 공식 건의 인도 유치 철회, 국가주도 유치전 선제 대응 기회

전남도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와 여수 중심지로 한 남해안남중권 개최도시 선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 추진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COP33 유치 의지를 전병하고, 개최도시

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개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글로벌 의제 설정에 직접 참여하는 위치에 선다. 정부 안팎에서는 COP 유치가 국가 위상과 외교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COP33은 2028년 11월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198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개최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번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지역 내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이후 COP31 또는 COP32에서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국가 차원의

유치 전략 수립과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국제 협상 대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인도가 COP33 유치 의사를 철회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국제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신호로 보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유치전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의

일지도 강조했다. 해당 권역은 석유화학 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탄소중립 전환 정책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COP 유치를 제안한 이후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기후주 간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연이어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을 확보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COP33 유치는 대한

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입증할 중요한 계기"라며 "인도의 유치 철회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결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기후주 간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연이어 개최 기반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유원식 국회의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최근 복원 사업을 마치고 개관을 앞둔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유원식 의장, 5·18 정신 헌법 수록...개헌 지지 호소

### 민주묘지 참배...“자랑스러운 민주화 정신 헌법에 새겨야” 국민의힘에 자유투표 촉구...옛 전남도청서 개헌 재차 강조

유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며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유 의장은 21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한 뒤 유상원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5·18 정신은 우리나라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긴 민주항쟁”이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정신, 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수록이 담긴 개헌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하여 “아쉽게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곳에 와서 솔하게 약속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고 실천의 시간이다”며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퇴에 따른 이탈표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유 의장은 헌화·분향으로 참배를 마친 뒤 5·18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닦고 헌화하며 넋을 기렸다. 유 의장은 참배 후 민주묘지 앞에서 “이번 광주 방문은 국회가 39년 만에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광주 시민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것”이

라며 “5·18 정신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이며,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 의장은 복원을 마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을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상황실과 도지사실 등을 둘러보고 상무관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경찰국 주재영상실과 상무관에서 항쟁 과정 및 희생자 시신 수습 과정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했다. 또 도청 외벽, 도청 앞 은행나무 등에 새겨진 탄두 흔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옛 전남도청은 2019년 복원사업을 시작해 최근 공사를 완료. 오는 5월 시민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다. 도청 본관·별관 회의실과 도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동의 내·외부를 복원에 공간별 전시실 등으로 활용된다. 관람을 마친 뒤 유 의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장은 “복원된 전남도청 모습이 정말 뜻깊고 당시의 처열함, 처참함, 단호함, 분노가 그대로 새겨져 있어서 가슴이 아주 먹먹하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당당하게 새겨지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 대표들과 지난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9~10명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은 이르면 다음달 4일에서 10일 사이 국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내달 10일까지는 국회 의결이 완료돼야 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로도 받는다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지방세입 개정안 입법예고

과오납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령 하위법령’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택스 등에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번거로워 소액 환급금을 지급받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1337만건) 이고, 이중 미환급금은 0.7% 수준인 약 322억원(87만건)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페이머니는 은행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결제, 충전이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있다. 아직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으로 어떤 페이머니가 사용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페이머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고부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유지한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다. 다주택 및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국제외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보유한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제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양주·강화)의 면제 기준을 현행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경우 현행 면제 기준인 60㎡ 이하를 유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 ‘고유가 지원금’ 광주 분담금 전액 시비 부담 380억원 규모...5개 자치구 재정 고려

광주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금 380억원을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19면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소득하위 70% 포함해 97만여명으로 파악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차 점수를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광주지역 예산은 1700억원 규모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마련된다. 정부 예산 1645억원은 확보 됐으며 광주시는 38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1차 신청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시와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와 분담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끝에 50대 50 부담으로 확정됐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광주시가 전액 시비로 총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접수창구 운영과 선불카드 발급 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 이의신청 처리 등을 총괄

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어 국민서비스전달팀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수령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50만원,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에 15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점수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5·0’ 신청이 가능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동 불안으로 인해 기름값도 오르고, 석유화학 업체들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380억원은 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보험료 90% 지원 도, 벼·배추 등 78개 품목 대상...농가 경영 안정 기여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자 전남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기상 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4월 이례적인 우박으로 도내 700여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엘니노 영향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가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벼와 배추를 포함해 총 78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

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원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입을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가입은 4월부터 벼, 대파, 고추 등 주요 품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희망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보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벼 깨서무늬병 등 8건의 농업재해가 발생해 피해 면적이 3만6342ha에 달했다. 이에 따라 69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지원됐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234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기업유치 카드’서 계속

이에 따라 발전소 인근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 확립과 함께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송·변전 설비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공기업 중심 투자 구조

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일회성 세계 헤럴드보다 ‘저비용 전력 공급’을 더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과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일회성 세계 헤럴드보다 ‘저비용 전력 공급’을 더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과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일회성 세계 헤럴드보다 ‘저비용 전력 공급’을 더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과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